

“총칼 대신 경제 앞세운 제2의 침략 행위 즉각 철회하라”

들끓는 광주·전남 민심

시의회 강제징용 배상 이행 촉구
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박자
9월 개학 모든 학교 계기 수업
시민단체 등 규탄 성명 잇따라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광주전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광주시의회(김동찬 의장)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철회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적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대한 전범 기업의 실질적 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백색국가 배제)관계 회복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제사회의 경제 체제 우려

를 현실로 만들어 버린 최악의 수일뿐”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압박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외교이며 ‘세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무역 및 지정학적 분쟁 해결’에 노력하지는 G20 결의를 한 달여 만에 뒤엎어 버리는 국제적인 자해행위”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착취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자 명백한 경제 침략이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는 일본 정부의 역사의식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다”며 “역사의 가해자가 사과는 뒤로 한 채 역사의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행위에 우리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계기교육 수업자료 개발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또 9월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현장 계기수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이다”며 “우리는 무력으로 국권을 침탈했던 일제에 맞서 싸우는 등 시련을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있어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진보연대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제2의 침략 자행하는 아베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은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워 제2의 침략을 자행하는 만행으로 명백히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이다”며 “우리는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민족, 민중에게 또다시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 규탄하며 경제침략, 경제전쟁 조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정권이 강행한 억지 화해와 억지 동맹을 일본이 스스로 썼으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희 기자 kimyh@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 동구 총창로에 일본 규탄 관련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靑 상황반·TF팀 가동...범정부 대책 마련 속도

당정청, 중장기 대책 논의
청와대 참모진 SNS 여론전
광복절 경축사 변경점 될 듯

일본 정부가 최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4일 대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 팀이 활동을 시작한 것에 더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냈고, 참모들도 적극적으로 ‘극일 여론전’에 동참하는 등 총력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강력한 “맞벌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4일에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기로 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비상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주간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남겨 두 보다 적극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청와대 대응조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SNS를 활용한 장외 여론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부 부(副)대신인 문 대통령을 ‘무례하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며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을 보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중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발언에

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정면대응을 선포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해 ‘극일(克日)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이런 대일 강경 기조는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언급한 이상, 대일 상응조치의 강도나 비판 수위 등은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메시지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열흘간 양국의 외교교섭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연장 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나올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8월 28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

신고센터 개소하고 금융·세제·수출입 지원반 구성

광주시·전남도 기업 피해 줄이기
추진단·민관협의회 다각 대책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성명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대책규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제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이미 꾸려 운영중이다. 또 각 실·국은 물론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상황·금융지원·수출입 지원반을 가동중이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내에 수출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산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6일 첫 회의를 연다. 광주시의 경우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은 광주지역 소재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112곳이 대상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이뤄진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는 운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전남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3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452개 기업이 2.5% 수준인 9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품 중 화학공업제품이 52.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와 철강 등 기타 12.8% 등이다. 전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61-287-9898)’에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접수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

고 있다. 또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품을 팔아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한국 제외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했다”며 “150만 광주 시민은 국제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일질 거부한 채 무역전쟁을 선포한 일본을 규탄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과 미래선도 산업을 겨냥한 의도적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세계 경제질서를 깨뜨리는 경제보복 행위도 즉각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HNT 하나투어

★ 7~8월 한정운항 ★

무안공항 출발 몽골(울란바타르)

▶ 몽골미아트항공
8월 5일(월), 9일(금), 13일(화), 17일(토) 3박5일

▶ 제주항공
7월 26일~8월 23일 매주(화) 3박4일, (금) 4박5일

※ 항공사 및 현지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8월 최고기온 22°C

몽골에서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추천포인트 ▶ ① 쏟아지는 별감상 ② 게르숙박 ③ 초원승마체험

savepack CNPF85	하나팩 CNPF87	하나 트레킹 & 레포츠 CNK87
특가 가격이 혜택	추천 완전정복일정	이색 트레킹2회
몽골·테를지 4일, 5일	몽골·테를지 4일, 5일	몽골 트레킹 5일
799,000원~	1,149,000원~	1,4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게르2박 숙박 #테를지국립공원	#게르1박 숙박 #4성급호텔 #승마체험	#노소영 #특식3회 #게르1박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관광]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속이한 사항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통보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산/불편임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 포함 상품에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국제항공료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참수 권고 ●여행 금지